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착수... 신속 제명 vs 절차 중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자문위 절차 생략 제명안 본회의 상정 제안

민주당 '절차적 정당성' 지적 "급하다고 건넬 수 없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 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 차원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에 따른 논의를 주장하며 맞섰다. 다만 여야가 여론을 고려, 빠른 절차에 공감한 만큼 김 의원 징계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간사 개선의 건 ▲소위원회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에 이양수 국민의힘, 야당 간사는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리특위는 간사 및 소위 구성안을 처리한 뒤 김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자문위원회



변재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 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문위 요청 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 기한에서 의견 제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 의견 청취 생략 후 본회의에 제명안 상정을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도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가

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 간 논의 후 결정해달라고 했다.

여야 협의로 김 의원 징계 심의가 시작되면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된다. 경고·사과·출석 정지는 본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원직 신분은 유지하게 된다.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적의원 3분

의 2 찬성에 따라 결정된다.

암호화폐 투자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편이다. 김 의원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도 이를 고려한 듯,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자체조사 종료 후 윤리위 제소'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의 의혹이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국민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스1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 코인 의혹을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야 한다'는 응답은 57.6%였다. '개인 투자이므로 문제없다'는 응답은 42.4%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 자진 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공식 출범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7일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맞서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사이버위기 통합대응을 위한 조직운영을 본격화한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올해 3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국정원과 정부·공공·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안보실이 이를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대통령실

尹 대통령 "이주민 제도 개선 이뤄져야"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 회의 참석 전문가 의견 청취... 정책토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민 정책과 관련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주민 역시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이주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이주민 수가 많이 늘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유익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가 출범 이후 국가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위를 가동해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트남·미얀마·러시아·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당사자 7명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이 개별적인 현안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것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평소 의중을 반영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우리 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특히,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출생-보육-교육'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도 논의됐다.

특위는 이주민 통합방향으로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후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 동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

與野 광주 집결... 호남민심 공략 총력전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주요 정당, 의원 전원참석 방침 '5·18정신' 헌법 수록 메시지 주목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위해 광주로 향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5·18 편향' 논란을 겪은 후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국민의힘과, 당내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2년 연속 소속 국회의원이 대거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 특별 사유가 있는 의원을 제외하곤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당협위원장 43명도 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찾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오

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로 향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원을 대표하는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서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5·18이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행사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광주를 찾는 것은 정부의 인선과 당 지도부의 설화로 식어버린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반면, '덧발' 호남을 찾은 민주당 역시 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 일정을 소화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18일 오전 단체로 당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광주를 찾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추모 후 기자들에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계속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가 공통분모를 찾아 단일대오 구축에 실마리를 잡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과 진보당도 전원 참석 방침을 정하고 발길을 광주로 향한다. 윤호수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정신 헌법 수록과 김광동 파면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5·18을 언급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